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첫 선출(3/10, 조선중앙통신)**
 - 중앙선거위원회는 10일 발표한 '보도'에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의 전체 선거자가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대의원 당선 후 첫 공개활동...軍 공연 관람(3/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 경연에서 당선된 제567부대, 제324부대, 제233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함께 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대의원 발표...신실세 대거 진입(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11일 정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했다"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공개함.
 - 김정은 체제에서 신진 세력으로 떠오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 부국장, 조연준·최휘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 군사령부 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이 대의원에 새로 뽑힘.
 - 김경희 당비서, 감금설이 나왔던 최룡해 군 정치국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당·정·군 고위인물들은 12기에 이어 이번에도 대의원이 됨.
 - 대외 부문에서는 지재룡 주중 대사와 자성남 유엔 대사,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던 원동연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였던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은 이번에 새로 대의원이 됐고 박의춘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 등은 연임함.

- 문경덕 당비서와 로성실 전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등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리영수 당 부장, 박명철 전 체육상 등 대부분 인사는 대의원이 됨.
- 이밖에 현영철 전 총참모장, 현철해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재경 전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명국 전 작전국장 등 은퇴한 군 원로그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인 김옥의 아버지 김효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도 대의원에서 빠짐.

● 北 '김일성 의형제' 김일 부각... "수령 용위 본보기"(3/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4면의 3분의 2를 할애해 실은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든 열혈의 혁명투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평생을 충성한 김일의 삶을 자세히 소개함.
- 노동신문은 김 주석 유일영도체계 확립의 중요한 계기였던 1956년 8월 종파투쟁 과정에서 김일이 반종파분자들과 투쟁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당의 유일영도체계를 세우는 오늘의 투쟁에서 김일 동지의 일생은 우리 인민이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군사학교 사격경기 참관...연일 軍 행보(3/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사격경기 참관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 부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함께 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을 대동하고 리모델링 중인 중앙동물원을 둘러봤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대의원 첫 선출 계기로 연일 '충성' 강조(3/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은 12일 김책공업대 정보과학기술대학 연구사들을 인용해 "김정은 원수님을 대의원으로 추대한 것은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 중심,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표시"라고 주장함.
- 특히 중앙방송은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김 제1위원장에게 축하문을 보냈으며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

● 北 신문 "대의원 선거, 김정은 절대 신뢰심의 분출"(3/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추대한 것은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13일 '우리 공화국 정권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펼쳐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김 제1위원장이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100% 찬성률로 선출된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심의 분출"이라고 주장함.

● 北, 연일 새 '혁명전적지' 띄워 '혁명전통' 강조(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2면의 3분의 2를 할애해 상산 혁명전적지 방문기사와 사진을 싣고 "안주지구 비밀근거지에는 수령 결사옹위, 혁명적 신념 고수의 구호문헌이 유달리 많다"고 밝힘.
- 신문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는 항일투쟁 시기 수령 결사옹위를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었다"라며 "우리 혁명사의 첫 연대를 수령 결사옹위로 수놓은 혁명선열들의 정신이 구호문헌들에 살아있다"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3/11,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 경연에 당선된 인민군 제567·제324·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공연 관람 및 창작가·예술인들에게 '특별 감사' 전달(3.11,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최룡해, 장정남, 서홍찬, 김수길, 조경철, 황병서 등 관람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지도(3.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서홍찬, 김수길, 김영철, 조경철, 황병서 등 동행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하고 있는 '중앙동물원' 방문(3.12,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광상, 리재일, 황병서, 마원춘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혁명열사) 사망(1984.3.9) 30주년 중앙추모회, 3.10 청년중앙회관에서 김기남(추모사)·양형섭·김평해·김용진·김영대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3.10, 중앙방송·평양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함경북도 송배전부 부지배인 '김금석' 등)에게 감사 전달(3.13,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3.9)는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대정치축전 이었다'며 쏘민은 "오늘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고 독려(3.13,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수령의 혁명사상 학습은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 위업 실현의 첫 공정이고 천만군민의 정신력 발동의 선결조건'이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데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존엄과 영광, 강성번영이 있다'고 주장(3.14, 중앙통신·노동신문)
- "노동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 주신 최대의 유산"이라고 '김일성·김정일 업적'을 칭송하며 '당의 통일단결이야말로 조선의 미래를 담보하는 승리의 기치'라고 강조(3.1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미얀마·시리아·우간다 대통령의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72주년 즈음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3.16, 중앙통신)

나. 경제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北에 밀가루·콩가루 200t 지원(3/11, 연합뉴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영양 지원을 위해 밀가루·영양콩가루 200t을 지원한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지원물자는 북한 남포시 대안군 지역 탁아소·유아원·학교의 영유아·아동과 임산부·산모를 중심으로 분배될 예정이며, 지원량은 북한의 1일 공급량 기준으로 약 10일치에 해당한다고 뉴스는 전함.
 - 북측은 이번 사업을 위해 332개 아동 시설 2만3천633명의 아동과 2만9천616명의 임산부 등 총 5만3천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지원물자를 분배하는 내용의 사전분배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어린이재단은 다음달 북한을 직접 방문해 해당 지역의 유치원·유아원 등을 돌며 지원물자가 제대로 분배됐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함.
- 北 관리 "홍콩 기업과 신의주 개발회사 설립"(3/12, 연합뉴스; 금수강산)
 - 연합뉴스가 12일 입수한 북한의 대외용 홍보잡지 '금수강산' 3월호



는 리철석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읽고 북한이 나선 등의 경제특구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 중이라고 강조함.

- 리 부위원장은 특히 서부국경 관문도시인 신의주가 과거 지리적 장점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개발을 위한 신의주 대중화개발합영총회사가 설립돼 남 먼저 차지한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北, 신의주서 외국인 숙박관광 허가"(3/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중국과 국경지역인 신의주에 대한 외국인의 숙박 관광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함.
 -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이 방송에 외국인이 신의주에서 숙박관광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관광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북한 주민의 민속 활동과 어린이 공연 등을 즐기고 의주혁명박물관, 김일성동상, 압록강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전함.
- 중국 연변 관광업계, 북한관광 활성화 모색(3/14, 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관광업계가 올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나선특구 일대를 관광하는 1박2일 상품의 경우 지난해까지 8명 이상이 모여야 출발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가이드와 동행하는 조건으로 개별관광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올해 나진항~금강산 해상관광코스에는 북한 선박이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훈춘에서 출발하는 코스 이외에 허룽(和龍)에서 나진항으로 가는 새 코스도 개통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에는 엔지(延吉)와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운항을 시작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4~5일짜리 관광상품을 판매할 계획임.
- 美 민간단체, 북한에 우물파기 장비·의약품 지원(3/14, 미국의소리(VOA))
 -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해온 미 민간단체 '웰스프링'은 금주 초 시추기계를 장착한 중장비용 대형트럭을 북한에 보냄.
 -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을 방문해 지금까지 200여 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 북한의 12개 시·도에 시추장비를 한대씩 보내 전국적으로 1만여 곳에서 우물을 파는 곳이 목표라고 밝힘.



- 또 다른 미국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도 최근 북한에 37만 달러(약 3억9천만원) 상당의 소아용 영양보조제와 의약품, 의료기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2.6-7)를 계기로 평양시 등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과학농사, 집약농사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선전(3.10, 중앙통신)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금속분말주사 성형기술이 금속 가공분야(가공품의 초정밀도 보장→각종 소형치차 등 제작)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가공방식, 원가절감, 생산성' 등 소개 선전(3.13, 중앙방송)
-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사이에 2013년 사회주의 증산경쟁 총화모임", 3.13 청년중앙회관에서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3.14, 중앙방송)
- 北 각지 농촌들, '전국적으로 4만여 정보의 냉습지가 개량됐다'고 소개(3.14, 중앙방송)
- 성·중앙기관들, 3월 1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파철 집중수송(3.15, 평양방송)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 유기농법 및 선진영농 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유기농법 장려를 위한 과업'으로 '△유기질비료(흙보산비료 등) 증산,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확립, △유기농법 도입성과 확대' 강조(3.16, 중앙통신·노동신문)

다. 군사

● 北, 동해로 단거리 로켓 25발 잇따라 발사(3/16, 연합뉴스)

- 북한이 16일 오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은 "이 로켓들은 동해안 지역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면서 "발사체의 사거리는 70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함.
- 6시20분부터 10분간 10발, 8시3분부터 5분간 8발, 9시28분부터 4분간 7발이 각각 발사됐으며, 로켓 발사 장소는 북한 원산 인근 갈마반도 쪽이며, 낙하지점은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사거리가 70km 내외여서 단거리 로켓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프로그 로켓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1차 의료기관 정상화 주력...원격진료도 활성화(3/13,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정은 체제 들어 유선중앙연구소(유방암센터),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문수기능회복원 등 의료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차 진료기관인 진료소를 정상화하는데도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RFA는 13일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농촌 진료소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진료소에 가면 고려약(한약)은 무료로 처방해준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3월 중순~4월 하순) 축구 1급 1차 연맹전(1급 남·여 축구 15·14개팀 참가), 3.10 김일성경기장에서 시작(3.10, 중앙통신)
- 림은심·김효심 선수, '2014년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3.10, 태국) 청년 여자 58kg급·63kg급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 3개(중합우승)·은메달 3개(2등) 획득(3.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관광총국 친선참관단(단장: 조성걸 부총국장), 3.10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3.10, 중앙통신·평양방송)
- 김정일의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지도 30주년 기념공연, 3월 12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3.12, 중앙통신·평양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현대적인 건축물들(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옥류아동병원)과 민속놀이(씨름, 활쏘기, 말타기)를 반영'한 새 우표들(개별우표 5종) 발행(3.12, 중앙통신)
- "사철푸른 잔디육종"을 위한 전국과학기술발표회, 3.13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에서 진행 및 '30여 건의 연구논문' 발표(3.13, 중앙통신)
- 北, 5월 5일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조선의학협회 주최) 개최 예정(3.14, 중앙통신)
- '2014년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 역도선수권대회(태국, 3.4~12)' 참가 역도선수들, 3.16 귀환 및 '경기 성과' 선전(3.16, 중앙방송·중앙통신)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노동신문, 또 美 비난..."도발 걸어오면 보복타격"(3/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미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이야말로



진짜 도발자, 위협세력"이라고 반박하며 보복을 경고함.

- 신문은 6면 '유치하고 비열한 도발 타령'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행동"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강도가 자기 집을 지키려는 주인의 행동이 온 동네를 위협한다고 떠드는 것과 같은 "황당하고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비난함.

● **중국 룡징에 북·중 예술인재양성센터 개소(3/11, 연변신문망)**

- 룡징시는 지난달 27일 시 문화관 내에 '중조(북중)친선예술인재양성센터'를 개설했다고 연변신문망이 11일 보도함.
- 시 문화관 관계자는 "북한과 협력해 중국 조선족 문화의 발원지인 룡징시에 민족예술을 위주로 하는 문화예술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양국 국민 간 친선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北 "美 국무부 대변인, 주제넘게 우리 선거에 시비"(3/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 민주주의가 있다 없다 하면서 주제넘게 쫓겨냈다(떠들었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골수에 배겨 우리의 선거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의 가소로운 넋두리"라고 주장함.

● **北, 연일 대미비난 수위 높여..."미국은 강패국가"(3/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우리의 승리적 전진에 경악한 강패국가의 비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도발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문제삼는 것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악(惡)'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비약적 발전 앞에서 내지르는 단말마적 비명"이라고 비난함.

● **"유엔식량농업기구 구제역 조사단 방북"(3/14, 미국의소리(VOA))**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피해 실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후안 루브로스 FAO 수의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구제역 조사단이 13일 북한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으며, 조사단은 FAO 소속의 구



제역 전문가 2명과 수의학 분야 역학전문가 1명으로 구성됨.

- 이들은 북한에 주재하는 FAO 관계자들과 함께 구제역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방역과 퇴치 지원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함.

● **北 통신, 아베 비난... "헌법에 도전해 전횡"(3/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스스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의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한 것을 "독단과 전횡"이라고 비판함.
- 통신은 14일 '재침의 칼을 버리는 사무라이 후예들'이라는 논평에서 아베 총리의 지난달 국회 답변을 문제 삼으며 "일본 집권자가 헌법에 도전하여 제멋대로 독단과 전횡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함.

● **北, 전략군 대변인 담화 유엔안보리 공식문건 배포(3/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4일 전략군 대변인이 최근 발표한 담화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으로 S/2014/159호로 배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신문 "이란 핵협상은 美의 '자주권 강탈전'"(3/14, 노동신문)**

- 신문은 14일 '미국의 중동 지배 전략과 대이란 정책'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이번 협상은 "이란에 있어서는 자기의 평화적 핵 활동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호전이고 미국에 있어서는 국제법적으로 부여된 이란의 자주적 권리를 빼앗기 위한 음흉한 강탈전"이라고 밝힘.
- 신문은 "현시기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본질은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압살과 대결"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대화와 평화 타령을 늘어놓곤 하는 미제에 대해 티끌만 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함.

● **北, '對美 비난' 국방위 성명 연일 선전(3/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1면의 절반을 할애해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한 각계의 반향'이란 제목으로 주민들의 반응을 대대적으로 소개함.
- 김죽송 기계공업성 국장은 기계공업성의 전체 간부가 국방위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자주로 존엄 높고 선군으로 부강번영하는 우리 조선에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하여 빛어지는 미국의 강도적 논리가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강조함.



■ 기타 (대외 일반)

- 러시아 외무성 순회대사('그리고리 로그비노프', 3.7 訪北), 3.10 귀국(3.10, 중앙통신·중앙방송)
 - '방북기간 북한 외무성 해당 일꾼들을 만나 쌍무관계 발전과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美 국무부 '러셀' 차관보의 상원 외교청 청문회(3.4) 발언에 대해 '미국의 남북관계문제 참견질, 내정간섭 책동'이라며 '미국의 남북관계개선 방해' 지속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를 지속 비난하며 '미국이 남한의 군사적 강점과 주한미군 범죄행위, 反北 적대시정책 실시 폐해' 등 거론하며 "미국을 세계최대 인권유린 범죄국가"라고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콜럼버스·블루릿지'호 부산 입항과 해상종합기동훈련 참가 등 관련 '미제호전광들에게 충고하건데 볼티모어·푸에블로호의 비극적 운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언(3.10, 평양방송·노동신문)
-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허용 새 지침, 3월 마련' 교도통신 보도인용, "〈무기수출 3원칙〉 포기의 본질적 목적은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아시아맹주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데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책동 경계' 강조(3.10,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일(黨 비서), 3월 11일 駐北 캄보디아 및 시리아 대사들과 각각 담화(3.11,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방부의 '육군 감축 계획(주한미군은 감축 계획 없음)' 발표를 거론하며 '미국은 남조선에서 무력을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증강하려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평화의 파괴자이며 전쟁의 근원'이라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3.12,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루비오' 상원의원의 발언(北 이대로 가면 10년 뒤 美 서부 해안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 관련 "'핵 폭격 실'까지 유포시키는 것은 우리(北)의 자위력과 국력 앞에 겁을 먹은 자들의 치졸한 시샘질이며 최후발악"이라고 비난하고 "핵무기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주장(3.12, 중앙통신·평양방송·노동신문)
- 【北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3.13)】 최근 리비아 앞 바다에서 北 인공기를 단 '유조선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이 배는 우리(北)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 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주장(3.13, 중앙통신)
- 【北 국방위 성명(3.14)】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 철회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선핵포기가 근간이라고 떠벌이며 놀아대지 말아야 하며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3.1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미국의 '北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발언(도발과 위협, 유엔결의 위반)에 대해 "피해망상증에 걸린 자들의 가소로운 발작증세"라며 '도발과 위협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공화국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 좌절감과 초조감의 발로'라고 주장(3.15, 평양방송)



-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군사적 힘으로 조선민족과 강토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가장 포악한 정책'이라고 비난 및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조(3.1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과 일본의 '연안진투함 공동개발 발표'는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준비 책동에 부채질하는 처사이며, 그들을 내세워 亞-太지역을 군사적으로 제패하기 위한 흥계'로 '지역의 군비경쟁과 긴장격화의 망동'이라고 비난(3.16,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北-러 경제적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3.17)' 65주년 즈음 '兩國 친선협조 관계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확대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3.16, 중앙통신·민주조선)
- 조선인강제연행 진상조사단 2014년 전국협의회, 3.8 「총련」 '가나가와현' 본부에서 동일본협의회 진행(3.16, 중앙통신·평양방송)

나. 북핵

● 北 국방위 "美 위협 계속되면 '핵억제력' 과시할 것"(3/14, 연합뉴스)

- 북한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처럼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연속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 미국의 '선(先) 핵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변할 것을 바라면서 그 무슨 '인내 전략'에 매달리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인 현실적 안목과 사고를 가진 주인이 백악관에 들어설 때까지 높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자는 것"이라고 말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에 비방 중단 또 요구..."합의 이행 엄중 기로"(3/12, 조선중앙방송)

-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언론들의 우리에게 대한 비방과 증상은 북남 고위급 접촉에서 이룩한 합의에 관계없이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답화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고 발언한 것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자들부터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신뢰 조성이 있고 북남관계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움직임을 엄밀히 주시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신문 '민족단합' 강조... "왕래·접촉 활성화해야"(3/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민족단합은 통일 위업 승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 통일 위업의 주요 과제인 동시에 최종 목적"이라고 밝힘.
 - 신문은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조국 통일 운동에 엄청난 저해를 주는 온갖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여 조국통일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라며 "백해무익한 비방중상과 무분별한 전쟁연습을 비롯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행위들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 **北 노동신문 "7·4공동성명 통일 3대 원칙 존중해야"(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따라 이루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가장 정당하고 위력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과 이념"은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라고 밝힘.
 - 신문은 "최근년간의 불미스러운 북남관계 현실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무시하고 그와 배치되게 행동하면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상태에 처하게 되고 종당에는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함.
- **北 "관계개선도 좋지만 '최고준엄' 비방 용납 않겠다"(3/14, 노동신문)**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4일 담화에서 유성옥 소장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노골적으로 뒤집어엎고 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어 유 소장의 발언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엄중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신뢰를 쌓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의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한 이번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해 사죄하도록 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



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정부, 2억1천만원 상당 기초의약품 대북지원 승인(3/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민간단체인 '인간의 대지'가 신청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요청을 승인했다고 11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에 대해 승인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 개최(3/13,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측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위원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함.
 - 통일부는 "상사중재위 가동은 개성공단에서의 분쟁 해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적 방식이 도입된다는 의미"라며 "개성공단 내 투자자산 보호,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민화협, 北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 시작(3/14,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홍사덕)는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을 해결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통일을 위한 농업 협력을 준비한다는 취지로서 민화협은 국민 1인당 1포대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에 20kg짜리 비료 100만 포대, 모두 2만t을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 개성공단 임금 10%인상 요구...정부, 협의불응키로(3/16, 연합뉴스)**
 - 북한이 매년 5% 올리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올해 10%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을 10% 올리자면서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힘.
 - 5만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가 1년에 받는 임금 총액은 8천만 달러(약 856억원)가량으로 북측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연간 86억원 가량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말함.

■ 기타 (대남)

-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 위업의 주요과제인 동시에 최종목적"이라며 '대결관념을 버리고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며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갈 때 이해와 신뢰는 두터워 질 것'이라고 '민족단합'을 강조(3.12,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대변인 담화(3.14)】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특강(3.11,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통일경제교실')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관련 '최고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적 조치' 촉구(3.1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한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일환으로 쉼 해상에서 연합기동훈련 실시(3.14) 관련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광기로 한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급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3.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유성옥 소장(안보전략연구소)의 새누리당 특강(김정은 리더십 지적 등)을 '날조로 일관된 비방중상, 청와대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대사건'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담보' 요구(3.16, 중앙통신·민주조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국 외교장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효과 있어">(3/12, 미국의소리)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한국 국립외교원과 한국 행정정책학회가 마련한 특별학술회의에서 현재 북핵 6자회담이 대화 재개 조건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상당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 윤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파나마에서 적발된 청천강 호 사건은 대북 제재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언급했다.
 - 윤 장관은 또 어떤 나라든지 필요 이상의 핵 물질을 보유하고 생산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관련국들의 협력을 통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케리 "북핵 위협에도 한일 핵무장 불용">(3/13, 미국의소리)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최근 중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자구적 핵무장에 나설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한일 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도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음.
 - 한편 케리 장관은 1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미국이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 <로버트 킹 美특사 "비핵화-北인권 연계안한다">(3/15,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는 비핵화를 논의하는 채널과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이 별도로 있으며 두 사안은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 킹 특사는 또 "북핵 6자회담의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북·미 양국간에 다뤄질 의제"라고 강조했다.
-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7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연락그룹을 만들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은 바 있음.
- 이어 킹 특사는 케네스 배씨 석방문제와 관련,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배씨가 풀려날 것이라는 데 대해 희망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그레그 "한반도 전술핵무기 철수, 내가 본국에 건의">(3/12, 연합뉴스)

- 지난달 중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도널드 그레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한에 핵무기가 있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입장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한 미국대사 시절인 1990년 자신이 본국 정부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철수를 직접 건의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 그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하기에 앞서 너무 많은 전제조건들을 갖다 붙여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진정으로 포기하기 원한다면 일단 대화와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레그 전 대사는 지난달 10일부터 닷새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리용호 외무성 제1부상이 면담당시 "우리는 남쪽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 미국이 간섭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으며, 그레그 전 대사는 방북결과를 미국 국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미사일 계획, ICBM·핵탄두 개발에 초점">(3/13, 미국의소리)

- 미국의 민간 정보업체인 '올 소스 아날리시스'의 북한 군사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며, 그 수는 6백 개에서 1천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 심지어 미 서부 지역을 위협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실전배치 가능한 핵탄두, 그리고 신뢰할만한 위성발사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미국 등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사능 분산장치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NHK는 북한과 일본이 오는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이달 3일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 외무성 담당자가 참석하는 적십자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언론은 적십자 실무협회가 북한과 일본 정부 간 정식 협의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언급했음.
- 북일 양측은 이달 3일 선양에서 리호림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다사카 오사무 일본적십자사 국제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년 7개월 만에 실무 협의를 열어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문제 등을 논의했음.
- 당시 회의에는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이 참석했으며 두 사람은 비공식 의견 교환도 했는데, 이를 두고 조만간 정식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은바 있음.

● <北피랍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딸, 몽골서 상봉>(3/16,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가 요코타의 딸 김은경(26) 씨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보도했음.
- 요미우리는 북한과 일본 당국자가 이달 3일 비공식 협의를 거쳐 김 씨와 메구미 부모의 만남에 합의했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이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본과 북한이 아닌 제삼국에서 면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으며, 북한이 김은경 씨의 몽골 방문을 허용한 것에는 납치 문제의 해결을 포함해 일본과의 협의를 진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 미국과 FTA 문제 해결뒤 TPP 진행할 수 있어"(3/14, 연합뉴스)

-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2주년 강연에서 "한국이 한미 FTA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뒤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 그는 한미 FTA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분야와 업종으로 비관세장벽과 자동차 분야를 지목했으며,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FTA가 전체적으로 윈-윈(win-win)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한국이 TPP에 가능한 대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TPP 12 개국은 협상을 완료하고 나서 한국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정부, 中에 해양경계 획정회담 조속개최 촉구(3/13, 연합뉴스)**
 - 정부는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중 해양법·국제법률국장회의에서 중국측에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고 밝혔다.
 - 한중 양국은 이어도 관할권 문제 등이 걸린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관련, 지난 1996년 이후 14차례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여 경계획정 원칙, 방법, 대상 수역 범위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며 회담도 수년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대해 중국측은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회담에서는 일부 영역이 겹치고 있는 양국간 대륙붕 외(外)측 한계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고, 남극에서의 연구, 유엔 내 국제법 이슈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했음.
- **한중 FTA 제10차 협상, 17일 일산 킨텍스 개최(3/14, 한국경제)**
 -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한중 FTA 제10차 협상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협상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열린 제9차 협상 이후 2달 만에 개최되는 협상이자, 초민감품목군이 포함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한 후 갖는 첫 협상이라는 점에서 두나라 간 어떤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도 상품과 서비스, 투자, 규범, 경제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초민감품목국이 확정된 만큼 두나라는 한중 FTA 타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모순 발언 중단하고 진의 밝혀라"(3/13, 연합뉴스)**
 -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노담화에서 스스로 밝힌 일본군과 관련 현의 강제동원 직접관여를 부정하는 것은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비난했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모순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국제사회에 솔직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최근 '고노담화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연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1차 아베 정권 때 답변서에 분명히 적고 있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또 이달 말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변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로서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日, 한일차관협의를 '조건없는 정상회담' 고수"(3/13, 연합뉴스)

- NHK는 일본이 최근 열린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전제조건없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지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도했음.
- NHK는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2일 서울에서 조 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할 때 한국 측이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자 '전제조건없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 사이키 차관은 협의 내용을 13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아베 총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을 포함해 한일관계 개선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함.

● 아베 총리 "고노담화 수정 생각 안 해"(3/14,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담은 담화로 고노담화가 있다고 밝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아베 내각은 그것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지지통신은 총리 취임 전부터 고노담화 수정 의지를 밝혔던 아베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공개석상에서 고노담화 수정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는 처음이라고 보도했음.
- 한편 이날 같은 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노담화 검증 작업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연합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통해 입수한 미군 비밀해제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부대시설로 운영해왔음이 미군이 작성한 문서를 통해 확인했음.

라. 미·중 관계

● 백악관 "미·중 정상, 우크라 영토보전 '공감대'"(3/10, 연합뉴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밤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 완화가 양국 공통의 이익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카니 대변인은 특히 "두 정상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 광범위한 국제질서의 측면에서도 주권과 영토보전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 카니 대변인은 "두 정상은 미·중 양국 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이익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사태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중국, 남해영유권 갈등서 '필리핀 두둔' 미국에 반발(3/14,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이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유인)에 접근하던 필리핀 선박을 쫓아낸 것을 도발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중국의 조치는 도발적 행위로 지역긴장을 조성한다고 비난하고 필리핀이 1999년부터 '아유인'에 존재해 온 만큼 필리핀의 현상유지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필리핀 입장을 두둔했다.
- 친 대변인은 "필리핀의 행동은 중국권익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태도로 비당사국 신분과 부합하지 않고 영토갈등 문제에서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결국 미국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 마일 관계

● **미국방부 부차관 "日 핵무장 가능성 배제못해"(3/11, 연합뉴스)**

-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은 10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워무스 부차관은 만일 미국의 국방예산이 계속 줄어들 경우, "과학적으로 자체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춘 국가들 사이에서 핵확산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일본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 그는 또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왜 연구용 플루토늄 반환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관점은 미·일 동맹이 강건하게 남아있는 한 어떤 종류의 핵능력도 갖출 필요가 없다"



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예산 축소 美, 日과 연안전투함 공동 개발 추진(3/12, 연합뉴스)**
 - 미국의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위크(AW)는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국방부가 애초 52척에서 32척으로 줄어든 LCS 발주 규모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일본과 개량형 LCS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최근 마련했다고 전했다.
 - 이러한 사실은 일본 주둔 미 해군 사령부와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 동시에 확인됐으며, 특히 일본 외무성은 "양국은 상호방위지원(MDA)협약에 따라 고속 LCS 최적화를 위한 공동개발 연구에 관한 문서를 4일 도쿄에서 교환했다"고 밝혔다.
 -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천명한 미국으로서는 예산 삭감에 따라 발생한 LCS 전력 공백을 일본을 통해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고, 일본도 특히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인 LCS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게임이라고 풀이했다.
- **"美日, 핵안보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모색"〈日신문〉(3/12, 연합뉴스)**
 -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이달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산케이는 12~13일 서울을 방문하는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만나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신문은 이러한 행보는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대화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지닌 미국이 중재 역할에 나선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 **美 국무부 "아베 총리 무라야마담화 계승 발언 환영"(3/1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을 받고 "무라야마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의 사과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장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무부는 이어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 진전으로 간주한다"고 평가했으며,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좋은 관계는 두 나라 자체는 물론 지역과 미국에 있어서도 최선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앞서 미국은 내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양국, 특히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서도록 다각도의 압박을 가해왔다.
 - 박근혜 대통령도 15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바. 미·러 관계

● 다시 불붙은 美·러 '중앙아시아 주도권' 신경전(3/11, 연합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린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주도권 신경전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 올해는 역내 맹주로 떠오른 카자흐스탄이 주무대가 될 전망이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을 상대로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한발 앞서 나간 푸틴은 이날 나자르바예프로부터 "카자흐는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이다. 러시아를 이해한다"라는 대답을 끌어냈음.
- 러시아에 있어 카자흐는 옛소련권에서 러시아 다음의 경제 대국이고, 미국은 중동지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카자흐를 중시하고 있음.

● 미-러 외무 전화 "우크라이나 주권" "크림 자결권" 대립(3/1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음.
- 쟈 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러시아와 대화를 지속하길 원하며, 대화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면책권을 보호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으로부터 이를 충족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크림반도가 국제법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음.
- 한편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총리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새 정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러시아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는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사. 중일 관계

● 日방위성 "中군용기 오키나와 인근 접근해 긴급발진"(3/9,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중국군 항공기 3대가 9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인근 상공에 접근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했다고 밝혔음.
- 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중국군의 정보수집기인 Y-8기 1대와 폭격기 H-6기 2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공해 상공을 통해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왕복하며 비행했음.



- 통신은 방위성이 중국 항공기가 태평양까지 비행했다고 확인한 것이 작년 10월 25~27일 3일 연속 중국 항공기가 태평양을 비행했다고 밝힌 것 이후 첫 사례라고 전했다.

● 주일 중국대사 "역사문제가 먼저" 아베에 일침(3/11, 연합뉴스)

- 청용화 주일 중국대사는 11일 보도된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성사되지 못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관해 "역사 문제에서 일본 측이 개선책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그는 올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무자급에서 쌓아 올린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역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성의가 전해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청 대사는 "관계 냉각이 민간에 영향을 주는 사태에 이르면 쌍방에게 손해"라며 "민간 교류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대지진 3주년' 일본에 '대량 핵물질' 해명 촉구(3/11,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동일본대지진' 3주년을 맞은 일본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인을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철저히 공개하고 비정상적인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 그는 또 '일본의 지난 3년간에 걸친 복구작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진발생 직후 도의적, 물질적 측면에서 일본을 지원한 점을 거론한 뒤 "지난 3년간 재난복구에서 일본은 일련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 이어 그는 "그러나 일본은 핵 문제에서 여전히 국제사회를 이해시켜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핵물질 해명을 재차 강조했다.
-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정부가 주최하는 대지진 기념식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 일·러 관계

● 日 "우크라이나 새 정권과 직접 대화" 러시아에 촉구(3/12,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1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새 정권과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 양측은 1시간가량 전화 회담을 가졌고, 기시다 외무상은 러시아가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해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 기시다 외무상은 전화 회담 종료 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새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접 대화를 거부할 것



임을 시사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 교통통신은 기시다 외무상이 러시아가 크림 반도에 국제감시단이 파견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 정세가 러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해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 <우크라이나 사태> 아베 "러 크림 병합은 유엔헌장 위반"(3/12,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병합은 유엔 헌장과 양국간 조약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대 러시아 압력을 강화하려는 미국 및 유럽연합(EU)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 아베 총리는 이날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러시아로 파견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위해 가능한 행동을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 한편,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안 일본 아베 내각은 역점을 두고 있는 러시아와의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 미칠 영향 때문에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 기타

● 중국-필리핀, '난사군도 영유권 갈등' 증폭(3/11, 연합뉴스)

- 필리핀 국기를 단 선박 2척이 지난 9일 스프래틀리 제도의 산호초인 '아용인'(중국명 런이자오)에 정박을 시도하면서 설치물을 세우려 하자 중국 해경선이 이를 힘으로 저지하고 나섰으며, 중국 정부도 이런 사실을 10일 공식 확인했다.
-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런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 해역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11일 중국의 대사 직무 대행을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며, 외교부 성명을 통해 "중국의 행위는 필리핀 권익에 대한 명백한 위협"임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 "日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무기수출 족쇄뚫다"(3/10,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대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사실상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①국제평화, 안전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는다 ②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한다 ③방위장비나 물건 등의 제삼국 이전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 아베 신조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할 방위장비 이전의 3원칙을 이달 중에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요미우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적용되면 여러 분야에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음.

● **일본 '영토홍보' 강화하기로...대사평가제 도입 검토(3/12,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과거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국 주재 대사의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야마모토 이치타 영토문제담당상은 관계 부처 담당자를 불러 개최한 회의에서 "총리 관저가, 분투하는 대사의 활동을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안할 방침임.
- 통신은 이런 방안은 아베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일본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분석했음.

● **막 내린 중국 '兩會'...테러·스모그 대책에 초점(3/14, 연합뉴스)**

- 13일 막을 내린 올해 중국의 '양회'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을 논의하는 무대였음.
-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본격적인 테러 대응 논의와 심각한 스모그 대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대외정책 측면에서 올해 양회는 중국 정부의 강한 군대 건설과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외교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무대였음.
- 이 밖에도 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치들과 분야별 개혁 심화 방안, 부패척결 문제, 민생안정 조치들도 활발하게 논의됐고,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77번이나 언급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음.
-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주요 인선 발표가 없었고 일정도 다소 줄어든 채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예년보다 대 언론 개방폭도 확대된 것도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였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김정은 2012년 사치품 6억4천580만 달러나 사들여"(연합뉴스, 3/11)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2년 호화·사치 품목을 사들이는데 무려 6억4천580만 달러(6천886억 원가량)나 썼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의 이성운 교수와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에 기고한 '북한의 형거게임'이라는 기고문에서 지난달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함.
 - 6억4천580만 달러는 김 위원장이 2012년 화장품, 핸드백, 가죽 제품, 시계, 전자제품, 승용차, 술 등 고가의 사치품목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돈의 규모임.
 - 이 교수와 스탠튼 변호사는 김 위원장의 사치품목 구입비용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2013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재원의 규모 1억5천만 달러와 비교함.
 - 그러면서 이 교수와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유럽국가와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럽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함.

- "북한 선거, 정권 정당성 위한 동원 행사"(미국의 소리, 3/11)
 - 북한의 선거는 정권의 정당성과 체제 결속을 위한 동원 행사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이 지적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국제연구소의 캐반 스테러 연구원은 9일 이 연구소 블로그에 북한의 이번 선거를 '광란'으로 묘사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100퍼센트에 달하는 투표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미국의 'CNN' 방송은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를 인용해, 북한의 선거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선전 행위에 불과하다고 전함.
 -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진성 '뉴 포커스' 대표는 북한의 선거는 동원 행사라고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선거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2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선거는 주민의 동향과 주거 실태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함.
- 특히 5년에 한 번씩 치르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방북명자를 색출하고 탈북자 가정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임.

● **미 국무부 "북한 선거는 민주주의 모델 아냐"(미국의 소리, 3/11)**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레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0퍼센트의 찬성으로 대의원에 선출된 데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이 아냐"라고 답변함.
- 사키 대변인은 이어 실제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100 퍼센트의 찬성률이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함.

● **北옥수수, 2년만에 천원대로 가격 하락... "구매력 향상 영향"(데일리NK, 3/11)**

- 북한 평양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 쌀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쌀 대체 식량인 옥수수 가격이 2년 만에 천 원대로 하락함.
- 소식통은 지난 2년 동안 옥수수 가격이 쌀값의 절반 수준을 유지했지만 쌀 공급 증가와 주민들의 구매력 증가로 이런 추세가 무너졌다고 전함.
- 북한 양강도 해산 소식통은 "1, 2월에 2000~2200원이었던 옥수수(1kg) 가격이 최근 들어 1500원으로 떨어졌다"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싸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옥수수를 찾는 주민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주민들은 '쌀 가격이 4000원대면 굳이 강냉이(옥수수)를 사먹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래서인지 현재 시장에서는 옥수수보다 쌀 판매가 더 잘 되고 있다"고 덧붙임.
- 옥수수 가격이 1500원까지 내려간 데 대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평양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지속적으로 쌀 식량 배급이 이뤄진 점과 지난해 북한 전역에서 풍년이 든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음.
- 이와 관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쌀 보다는 옥수수 지원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쌀 보다 옥수수 가격이 더 빨리 하락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배급과 풍년으로 시장에서 쌀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노동자 월급 인상에 따른 구매력이 커진 주민들이 쌀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옥수수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국경없는 기자회 "북한은 인터넷의 적"(자유아시아방송, 3/12)

- 전 세계 언론자유증진과 언론 상황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12일 인터넷상황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파키스탄과 쿠바, 그리고 중국 등과 함께 북한을 '인터넷의 적(Enemies of the Internet)'으로 규정
- 국경없는 기자회는 해마다 각국의 정부와 기관들이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기자회는 북한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기구로 중앙과학기술통보사(CSTIA, Centr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Agency) 등을 지목함.
- 기자회는 북한의 경우 외부세계와의 인터넷접속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내 부통신망 광명망조차 엄격한 감시와 검열을 받는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에게 인터넷이란 '필요하지만 위협적인 것'이라며, 소수의 연구자와 기술자만이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본래의 연구목적이 아닌 북한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을 검색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처벌이 잇따른다고 설명함.
- 특히 200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세워진 북한의 합동검열 그룹인 일명 '109상무', 즉 '109그루빠'를 언급하며, 이 기관은 외부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의 내용과 시설 및 장치, 그리고 디지털 통신기기 등을 추적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함.

● 북, 마약 남용으로 결핵환자 급증(자유아시아방송, 3/12)

- 최근 북한 전역에 전례 없이 결핵환자가 급증해 보건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은밀하게 남용되는 마약이 결핵환자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대두됨.
- 함경북도 보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지난 1월 김정은이 2017년까지 결핵을 무조건 퇴치하라고 지시해 보건성에서 전국적으로 결핵퇴치 운동을 전개하라는 방침을 긴급하게 내리면서 아랫단위에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결핵병동을 짓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북한에서 결핵환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마약으로 인한 신체허약과 만성적인 영양결핍에 있다고 지적함.



- 게다가 2000년 들어 급증한 마약중독자들도 결핵환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 북한 소식통은 "마약 중독자들은 얼음연기를 쏘이면 환각상태에서 밥이나 음식을 일절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가 급격히 허약해진다"면서 "이런 사람들의 결핵균은 잠복성이 아니라 개방성이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힘.
- 하지만, 이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결핵병동이 마땅치 않아 모든 주민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소식통은 우려를 표시함.
- 소식통은 "이미 함경북도에서는 결핵병동을 짓는데 미화 300만 달러가 배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핵약품을 김정은의 친구인 미국 프로농구선수 출신 테니스 로드먼이 유엔을 통해 들여오게 된다는 소문까지 퍼졌다"고 주장함.

● 북, 보건환경 개선 조짐(자유아시아방송, 3/12)

- 북한의 보건환경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 진료소들이 정상 운영되고 수술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지급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얼마 전 친구가 급성맹장 수술을 받았다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병원에서 수술환자들에게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놓아주었고, 요즘 유행되는 악성감기환자들에게는 '아목실린'과 '암페실린'을 이틀 분씩 처방해 주었다"고 전함.
- 또한 지금까지 맹장수술의 경우는 보통 24시간, 길어야 이틀간 입원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 맹장수술 환자들이 짧게는 3일, 길게는 한주동안도 입원이 가능했다고 언급함.
- 또 입원실에는 특별히 석탄과 화목(땃나무)이 보장돼 그리 춥지 않았으면서, 다만 식사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가족들이 보장해야 했다고 말함.
- 자강도의 한 소식통도 "지난해 가을부터 농촌 진료소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며 "진료소에 가면 '패독산'과 '아편꽃 현초알약'과 같은 고려약(한약)은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하지만 농촌 진료소들엔 기초적인 '고려약'만 있을 뿐 신약(화학약품)은 없다며 "시내(도시)병원들에서 제한적으로 처방해주는 신약도 대부분 국산이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약품들로 알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임.
- 보건부분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기초의약품 생산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마약범죄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기초적인 의약품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한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 내용을 언급함.



-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병이 나면 의료시설보다는 장마당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강도의 소식통은 "아직 병원에서 기초약품을 무료로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장마당에서도 팔리는 의약품들도 오히려 값이 오르면 올랐지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북 서민, 집전화 번호 자주 바뀌어 불편(자유아시아방송, 3/13)

- 북한에서 전화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무슨 영문인지 체신당국이 자주 유선 전화번호를 바꿔 서민들의 불편이 큼.
- 얼마 전 평양에서 국경지방으로 여행 왔다는 한 여성은 이 여성은 특하면 체신국에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통보해준다면서 왜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의아해함.
- 이 여성은 전화번호가 드물게는 1년, 빠르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때도 있다며 자기 연락처를 한번 고정시키기가 힘들다고 밝힘.
- 북한은 다른 나라처럼 개인이 쓰는 전화번호를 오랫동안 자기 소유로 유지할 수 없고, 또 특정 번호인 경우 통신을 담당하는 체신국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음.
- 고정된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친척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하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연락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게 여러 주민들의 반응임.
- 북한 체신국의 이러한 전화번호 바꾸기가 주민 통제를 위한 얇은 수가 아닌가는 의심도 있음.
-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한 주민은 "집전화를 통해 평양과 다른 지방의 물가를 매일 알아볼 수 있어 장사도 훨씬 편해졌다"면서 "지난 2007년에도 3천 원 이상 전화비가 나오는 사람들을 장사꾼이라고 감시대상에 올렸던 적이 있다"고 밝히며 "지금도 그런 장사를 막기 위해 번호를 바꾸는 것 아닌가"고 의심함.
- 한편, 북한의 비밀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번호를 바꾼다는 의견도 있는데, 함경남도 함흥에서 중국 방문 왔다는 한 주민은 "사람들이 웬만한 정보는 다 암호로 약속하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진다"면서 "손전화도 많이 늘고 유선전화도 많아 정부에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워 그러는 것 아닌가"고 언급함.

● FAO, 북한 현지 구제역 조사단 13일 파견(미국의 소리, 3/13)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후안 루브로스 (Juan Lubroth) 수의국 국장은 북한의 구제역 지원을 위해 파견기로 한 조사단에 비자가 발급되어 13일 평양으로 떠났다고 밝힘.
- 조사단은 식량농업기구 소속 구제역 전문가 2명과 수의 분야 역



학전문가 1명 등 3명으로 구성됨.

- 이들은 북한 내 식량농업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구제역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방역과 퇴치 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임.
- 식량농업기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도 조사단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번 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 북, '12년제 의무교육' 또 늦추나?(자유아시아방송, 3/13)

- 북한이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선포했으나 아직 교육현장에 필요한 교과서들조차 보급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새 학년도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교과서도 모두 바뀌게 된다"고 밝힘.
- 얼마 전부터는 각 시, 군, '교원강습소'들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일꾼 강습'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올해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것은 맞다"고 말하며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
-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하려면 지금쯤은 매 학교들에 새로운 교과서가 배포돼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 '교육도서 보급소'들에도 새로운 교과서들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함.
- 특히 소학교(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김정은 원수님 어린시절"이라는 교재가 새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문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일반 교과서들조차 내려오지 않아 현지 교직원들속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의 전면시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음.

● 미국 "북한 여성·청년 등 각계각층 필로폰 확산"(연합뉴스, 3/14)

- 미국 국무부가 이달 초 발간한 '2014 국제마약통제전략(INCR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마약 사용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법 마약은 필로폰으로 내수용이나 수출용으로 북한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여성과 젊은 층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흡연이나 주사를 통한 주입보다는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 수출되기도 했던 양귀비(아편 원료)의 재배는 최근 급격히 줄었거나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함.
-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당국이나 국영 언론에서 불법 마약과 관련해 발표한 정보는 사실상 없었다"면서 탈북자나 여행객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마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함.
 -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필로폰 등 불법 마약의 생산이나 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치 않다고 전제한 뒤 "최근 북한 당국이 개입한 마약 사건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줄었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이 이를 감추는 데 능숙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 또 지난해 일부 마약거래 행위가 포착되기도 했으나 북한 당국이 이런 거래를 지시하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역시 없다고 밝힘.
 - 한 소식통은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 내 마약 생산과 가짜담배 제조 등의 불법 생산 의혹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지적됐으나 올해는 관련 정보 부족을 이유로 내용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北 국방위 "美 위협 계속되면 '핵억제력' 과시할 것"**(연합뉴스, 3/14)

- 북한 국방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계속할 경우 북한의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위협함.
- 또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은 새로운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벌이기 시작한 우리에게 대한 터무니없는 인권 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는 아직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람 못살 사회, 약육강식의 전횡과 독단이 판을 치고 진정한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는 부럽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입장"이라고 덧붙임.

● **북한, 내부 정보유출 통제 강화... "쌀값도 국가 기밀"**(데일리NK, 3/14)

-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부 소식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국가 기밀로 취급하지 않았던 '쌀값 등 물가' 정보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경고하고 있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인민반 모임에서는 '외부와 전화통화로 공화국의 비밀이 다 새나가고 있다'는 식의 강연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면서 "강연자는 외부와 전화통화하다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교화소로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주민들은 지금 쌀값, 돼지고기, 강냉이(옥수수) 값이 얼마라는 것이 국가 비밀에 속한다는 이야기에 어이없어 한다"면서 이런 주민 통제 강화에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어 "국가 비밀이야 간부들이 더 잘 알고 우리 같은 주민들이 뭘 안다고 비밀이 새나가겠냐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면서 "전화로 '가격 문제'를 중국과 통화하면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밀수꾼들은 당장 먹고살 일에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임.

● "북, 공사인력 부족해 군복무 연장"(자유아시아방송, 3/14)

- 북한 당국이 여전히 만기복무자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있음.
- 중국에 잠시 체류 중인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아는 사람의 아들은 올해로 12년째 군대복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언급함.
- 최근 북한 간부들은 주민 강연에서 핵 보유로 인한 군사비 감축분을 경제에 올리게 된다고 여러 차례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복무 기간의 연장 소문에 대해 복수의 북한 소식통은 초모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취한 교육책이라고 입을 모았음.
- 북한군 군사건설국에서 10년 동안 복무했던 한 탈북자는 지금 초모생들은 1996~1997년에 태어난 학생들이라며 이시기 대아사로 인해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지적함.
- 한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경제 강국 건설을 표방하면서 공인력을 대대적으로 건설공사에 동원시키기 위해 대규모 숫자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됨.

2. 북한인권

● '북한인권을 위한 HR1771법' 패널 발표 및 촉구대회(크리스천투데이, 3/10)

- 지난 3월 5일(현지시각) 워싱턴 외교정책위원실에서 'H.R.1771'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북한 경제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법안)에 대한 패널 발표 및 촉구대회가 개최됨.
- 이날 미국 내 70여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 250만 미주 한인 대표 미주한인회총연합회(FKA), 북한인권위원회(HRNC),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등에서 참석함.
- 단체들은 지난 2013년 4월 발제된 'HR1771'(발제자 에드 로이스 외교정책위원장)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영 의회, 유엔 COI 후속조치 논의(자유아시아방송, 3/10)



- 지난달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가 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는 11일 영국 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논의할 예정임.
-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 출신인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과 휴먼라이츠워치, 세계기독교연대 등 영국의 인권전문가 세 명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나이스 경은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으며,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지 등을 설명할 예정임.
-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래드 애담스 아시아국장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인권 결의가 채택되길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영국 외무성과 대북인권단체 간의 회의에도 참석한다고 밝힘.
- 영국 외무성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인권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인권단체와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 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일 NGO, 강력한 대북 인권결의 촉구(자유아시아방송, 3/11)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C) 일본지부 회원인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달 말 채택될 대북인권결의안에 북한 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강력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함.
- 일본 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물론 그의 지시에 따라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람들까지 국제형사재판소나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조항을 포함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주민이 아닌 지도부를 겨냥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가토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사이키 아키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이들 인권단체가 원하는 강력한 문구가 대북인권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언급함.
- 또한 일본 정부 관계자로부터 개정된 초안이 강력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기대감을 표명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원장 "北에 BBC 한국어방송 필요"(연합뉴스, 3/12)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한국어 방송 서비스를 지지했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함.
 - 커비 위원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에서는 정보가 철저히 통제돼 외부세계의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BBC가 북한에 한국어 방송을 제공하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힘.
 - 영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의회 북한위원회를 중심으로 BBC 한국어 방송 도입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에 BBC 월드 한국어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바 있음.
 - 신문은 그러나 BBC가 최근 내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다고 전함.

- NCKK 화통위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하라"(크리스천투데이, 3/12)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조헌정 목사, 이하 화통위)가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함.
 - NCKK 화통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 이어 "이 대화의 자리에서 인도적 차원의 노력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것이기에 어떤 특정집단의 정치적인 수단과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 사회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음.

- 북아일랜드 의원, '인권 향의' 북한대사 소환 요구(미국의 소리, 3/14)

 -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의 기독교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하원의원들이 현하봉 영국주재 북한대사의 소환을 영국 정부에 요구함.
 - 북한 당국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와 정치범 수용소 내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임.
 - 영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낸 의원은 짐 새넌, 윌리엄 맥크리아, 제프리 도날드슨, 그레고리 캠벨, 데이비스 심슨, 새미 윌슨 등 6명임.
 - 짐 새넌 의원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극심한 종교 탄압으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협에 처해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게 북한대사 소환을 요구한 배경이라고 설명함.

- 대사 소환은 영국 정부의 몫이고, 현재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소환이 실제로 이뤄질 진 불투명하다고 언급함.
- 하지만 앞으로도 중국 당국에 탈북자 보호와 강제송환 금지를 권고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임.
- 민주연합당 클라이브 맥팔랜드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영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기독교 탄압 등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함.

● **박근혜 대통령 "몽골 대통령 북한 방문 때 발언 의미 있어"(미국의 소리, 3/14)**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잔다후 앵흐볼드 몽골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지난 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 일원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함.
-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북한 방문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교 연설에서 인민은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며,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함.

● **반기문 총장 보좌관 "국제사회, 북한 주민 보호책임 있어"(미국의 소리, 3/15)**

- 제니퍼 웰시 유엔 사무총장 국민보호책임 특별보좌관(The Special Adviser to the UN Secretary General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함.
- 웰시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국민 보호에 실패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에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세계의 관심이 시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위기에 고정돼 있지만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깜짝 놀랄 증언들은 북한 주민들도 시기적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행동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함.
- 웰시 보좌관은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부응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유엔 인권



이사회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유엔의 모든 관련 기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말함.

● 로버트 킹 美특사 "비핵화-北인권 연계안한다"(연합뉴스, 3/15)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서로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함.
-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7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연락그룹을 만들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은 바 있음.
- 킹 특사는 "북핵 6자회담의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북·미 양국 간에 다뤄질 의제"라고 강조함.
- 다만 "북한과 미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권상황과 관련해 좋은 기록을 가진 나라와 대화하기가 훨씬 쉬우며, 북한의 경우 분명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 또한 "지금은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라며 "6자회담이 열리면 그때 가서 인권문제를 (의제로) 추가할 수 있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은데 대해 "우리는 유럽연합, 일본과 함께 조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결의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함.
- 그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매우 지지한다고 표명하면서도 "만일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지할 것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현안이 많은 상황이어서 안보리 논의가 생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함.
- 킹 특사는 "미국은 중국과도 북한 인권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케네스 배씨 석방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석방 요청한 점을 들며 "우리는 북한 당국이 조속히 배씨를 사면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석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이 자신에 대한 망북 초청을 철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 등이 북한과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우리는 미국 적십자와도 대화를 나눴으며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결의안 내용이 진척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하태경 "킹 특사 北인권문제 6자회담 배제 발언 부적절"(뉴시스, 3/16)**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6자회담 의제 불필요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함.
 - 하 의원은 "킹 특사의 발언은 아마도 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6자회담에 인권문제를 의제로 올릴 경우 북한의 반발이 심화돼 회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연락그룹을 만들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까지 내놓았다"고 덧붙임.

- **국제 인권단체들, 유엔에 북한인권 개선 후속 조치 촉구(미국의 소리, 3/15)**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를 전후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의 행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17일 보고회 직후 공청회를 열고 유엔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임.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회는 국제사회의 행동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
 -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의 보고서 권고안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17일 조사위원회의 보고회 직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공청회에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등 유엔 고위 관계자들과 각국 외교관들,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임.
 - 이밖에도 17일 열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회를 전후해 제네바에서는 여러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이 유엔의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임.

3. 탈북자

- **탈북자단체 "中대사관 앞 탈북소녀상 설치 재추진"(연합뉴스, 3/10)**
 - 기독교인 탈북자 모임인 탈북동포회 등은 10일 오후 서울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 강제북송을 규탄함.
 - 이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보호 및 난민 송환 금지 원칙 준수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거부했다며 "국제난민협약 가입



국민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안전보장 이사국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함.

- 이어 "이에 우리는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단됐던 중국 대사관 앞 탈북 소녀상 설치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탈북자들 투표 위해 목숨 건 재입북...왜?(채널A, 3/10)**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던 탈북자들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
- 투표에 빠져 탈북 사실이 발각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전함.
-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탓에 북한 당국은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특히 투표자 본인인지 확인을 엄격히 하고 본인이 아니면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서 대리투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 목숨을 걸고 빠져나온 북한으로 몰래 다시 돌아간 이들은 대부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까지 머무를 것으로 보임.

● **檢, 탈북자 가장 北보위사령부 직파간첩 구속기소(연합뉴스, 3/10)**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를 적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함.
-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강건종합군관학교를 1998년 최우등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홍 씨는 이듬해인 1999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2012년 5월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됨.
- 홍 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음.
-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홍 씨는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도 받고 있음.
- 홍 씨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실제 북한에서 탈북하려고 하는 모녀를 도와 함께 중국 국경을 넘었지만 지난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 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조사결과 홍씨를 비롯한 남파 간첩들은 합동신문센터에서 공작 임무 외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 진짜 탈북자인 것처럼 위장함.



- **요즘 간첩, 탈북자 정보 수집·남한 先정착에 혈안(연합뉴스, 3/10)**
 - 검찰이 탈북자를 가장해 남파된 직파간첩 홍모(40)씨를 기소했으며,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남파 간첩들의 최신 활동 동향을 비교적 소상히 밝힘.
 - 검찰에 따르면 홍씨를 비롯한 요즘 북한 간첩은 ▲배출 기관 ▲침투 경로·방법 ▲수행 임무 등에서 과거 간첩과 차이를 보임.
 - 과거 남파 간첩은 주로 정찰총국(인민무력부 산하), 225국(노동당 산하, 구 대외연락부) 소속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남공작을 수행하는 군 소속 부서인 보위사령부(보위사) 출신이 많아짐.
 - 검찰은 또 북한의 간첩이 남한 정착의 첫 관문인 합동신문을 통과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합동신문만 통과하면 정착금, 거주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합법적 활동 공간 마련이 가능해 "북한은 '남한의 합동신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타개하느냐'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철저히 사전 교육을 하고 거짓말탐지기 적발을 피하고자 맹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간첩 임무만 제외하고 다른 내용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탐지기를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게 검찰 설명임.
 - 최근 간첩은 과거보다 '탈북자 정보' 수집에 훨씬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先) 정착 후(後) 임무부여'가 많음.
 - 또한 남한 정착에 성공하면 탈북자 단체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고 비전향 장기수와 접촉을 시도하기도 함.
 -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요즘 간첩은 예전처럼 공작금을 받고 내려오는 사례는 거의 없고 오히려 간첩들이 '돈을 벌어서' 북한에 '충성 송금'을 하는 사례는 있다고 검찰이 전함.

- **고급 아파트만 골라 텀 탈북자 빈집털이범 쇠고랑(연합뉴스, 3/11)**
 - 서울 수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과 경기권 고급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나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금품을 텀 혐의(특수절도)로 탈북자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힘.
 - 경찰은 이씨가 빈집을 터는 사이 주변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함께한 공범 A씨도 쫓고 있음.
 -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17일부터 2월 말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권, 경기도 화성·일산·분당 신도시 등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총 8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씨는 2006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공범 A씨와 교도소에서 만나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짐.



-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한국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달라 적응하기가 어려웠으며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범행했다고 자백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함.

● 탈북학생, 특성화고 특례입학 가능(내일신문, 3/13)

- 교육부가 진행하는 'HOPE 프로그램'은 우수 탈북학생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올해는 HOPE 프로그램을 수학 과학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학교나 가정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과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임.
- 담임교사 멘토링은 500명에서 2000명으로 전년대비 4배로 늘리고 학교를 통해 학생 1인당 80만원씩 지원할 계획임.
- 교육부는 탈북학생을 위한 교과서 종류도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표준용 교재 12종을 개발 보급하고 내년까지 32종을 인정도서로 보급할 계획임.
- 또한 탈북학생이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을 희망할 경우 특례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 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모든 탈북학생들이 학업을 중도포기하지 않고 꿈과 끼를 찾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통일이후 맞춤형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캐나다서 탈북자 출신 한국국적자들 대거 추방위기"(연합뉴스, 3/14)

-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한 탈북자 출신들이 '위장 난민 신청' 등을 했다가 적발돼 대거 추방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캐나다를 거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한 정치권 인사는 13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에 탈북자로서의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탈북자 출신 한국국적자들이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 숫자가 무려 600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이들 탈북자 출신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북한을 탈출한 것처럼 위장해 캐나다 정부에 이민을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캐나다 정부는 최근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하고 위장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미



난민을 허가해준 탈북자 출신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외교소식통은 "이들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착과정을 밟다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외국으로 나간 '탈남자'들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위장난민 신청으로 인해 진짜 난민지위가 필요한 '진성 탈북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언급함.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탈북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한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주 캐나다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캐나다 정부와도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위장난민을 신청한 탈북자 출신 개인들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4. 이산가족

● "미주한인 이산상봉안 내달 채택 목표"(자유아시아방송, 3/12)

- 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Encouraging reunion of divided Korean American families)을 미국 의회에 제출한 한국전 참전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결의안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음.
- 미국의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만나도록 북한이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안은 지난 6일 찰스 랭글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한국 전쟁 참전 의원들에 의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지난 11일부터 하원 의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고 있음.
-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하원의 해당 상임위원 외교위원회를 거쳐 하원 전체 투표를 통과해야 하고 상원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함.
- '한인 이산가족 상봉촉구결의안'은 한반도 분단으로 1천만 명의 한국인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간간히 열리고 있음에도 한국계 미국인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미국의 한인 이산가족들도 오랜만에 미국 정치권에서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환영하면서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결의안의 지지를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음.



5. 납북자

- **여주시, 6.25전쟁 납북자 신고 기한 연장(국제뉴스, 3/11)**
 - 여주시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함.
 - 한편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도 올해 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존속 기간까지 계속될 예정임.

- **춘천 '6·25전쟁' 납북 피해자 신고 연장(뉴스1, 3/14)**
 - 춘천시는 6·25전쟁 강제 납북 피해자 진상규명 신고를 2014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이번 진상규명은 납북자와 그 가족 명예회복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 연말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신청 기간을 늦췄음.

- **"北피랍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딸, 몽골서 상봉"(연합뉴스, 3/16)**
 -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부모가 요코타의 딸 김은경 씨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요코타의 아버지 시게루(滋·81)씨와 어머니 사키에(早紀江·78)씨가 이달 10~14일 메구미의 딸 김혜경(26) 씨를 만남.
 - 김혜경은 메구미와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은경 씨의 가명으로 알려져 있음.
 - 요미우리는 북한과 일본 당국자가 이달 3일 비공식 협의를 거쳐 김 씨와 메구미 부모의 만남에 합의했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고 이번 면회에는 김영남 씨도 동석했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본과 북한이 아닌 제삼국에서 면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으며,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6일 면회 성사를 "환영한다"고 언급함.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정부, 2억1천만원 상당 기초의약품 대북지원 승인(연합뉴스, 3/11)**

 - 통일부는 민간단체인 '인간의 대지'가 신청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힘.
 - 인간의 대지는 2억1천만원 상당의 감기약과 해열제 등 기초의약품을 북한 평안남도 19개 시·군 인민병원에 보낼 계획임.
 -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에 대해 승인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北에 밀가루·콩가루 200t 지원(연합뉴스, 3/11)**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영양 지원을 위해 밀가루·영양콩가루 200t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대북 지원으로는 최대 규모임.
 - 어린이재단은 사업비 2억여 원을 들여 밀가루 179.2t과 비타민·무기질이 함유된 영양 콩가루 20.8t 등을 마련했으며, 지원물자는 북한 남포시 대안군 지역 탁아소·육아원·학교의 영유아·아동과 임신부·산모를 중심으로 분배될 예정임.
 - 지원량은 북한의 1일 공급량 기준으로 약 10일치에 해당함.
 - 어린이재단은 북측이 이번 사업을 위해 332개 아동 시설 2만3천633명의 아동과 2만9천616명의 임산부 등 총 5만3천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지원물자를 분배하는 내용의 사전분배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함.
 - 이 단체는 다음달 북한을 직접 방문해 해당 지역의 유치원·유아원 등을 돌며 지원물자가 제대로 분배됐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물자 환송식은 12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항만시설에서 열릴 예정임.

- **민화협, 내일부터 '北에 비료 보내기 국민운동'(연합뉴스, 3/12)**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홍사덕)가 13일 '북한 100만 포대 비료 보내기 운동본부(가칭)' 발대식을 가지고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임.
 - 민화협은 농번기에 앞서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북한에 20kg짜리 복합비료 100만 포대를 보낸다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 국민 100만명이 동참하는 '국민 1인당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1계좌당 기부금은 복합비료 1포대 가격인 1만2천원으로 정했음.
 - 그러나 비료는 2010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대북 지원이 제한된 품목이어서 실제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민화협은 추후 통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 김영만 민화협 홍보위원장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할 수 있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 통일부는 민화협에서 비료 반출 신청을 해오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임.

● **미 NGO 북한에 영양제 등 지원, 4월 말 도착 예정(미국의 소리, 3/13)**

-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AmeriCares)가 북한에 지원한 의약품과 의료기구가 4월 말 북한에 도착해 평양과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제공될 예정임.
- 아메리케어스는 37만 달러 상당의 소아용 영양보조제와 의약품, 의료기구 등을 지원했음.
-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지난해 9월에 평양의 신경외과 병원에 지원한 항생제와 마취제, 의료기구 등으로 신경외과 의료진이 17차례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으며, "대북 지원물품이 급성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민화협 대규모 대북 비료지원' 허용 여부 주목(연합뉴스, 3/13)**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홍사덕)가 대규모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고 나서 정부가 이를 승인할지 주목되고 있음.
- 상당한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이 성사되면 5·24 조치 이후 크게 제한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음.
- 그러나 민화협은 애초 13일 사직공원에서 비료 보내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내부 준비 부족' 문제로 이를 갑작스럽게 연기했음.
- 홍사덕 의장은 이날 민화협 간부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제가 밀어붙였던 게 화근이었다. 큰일답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민화협 관계자는 "비료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함.
- 정부는 일단 민화협의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민화협이 구체적인 신청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5·24 조치가 비료라는 품목 자체의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 정부 관계자는 홍 의장이 청와대나 정부와 일정한 교감 속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기 꺼끄러운 대북지원 확대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경계하며 "정부의 운신 폭을 넓혀 주겠다는 홍 의장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함.



- 미 NGO, 북 우물파기 중장비 지원(자유아시아방송, 3/13)
 - 미국의 민간단체 웰스프링은 중국 세관 통관 문제로 발이 묶였던 비포장 도로용 사륜구동차를 최근 북한에 보냈고 이번 주에는 중장비용 대형 트럭을 북한에 추가 지원했다고 밝힘.
 -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북한의 협력 기관인 지하수개발연구소의 요청으로 지난 11일 중국산 중장비용 대형트럭을 보냈다고 설명함.
 - 중국 세관 통관 문제로 반 년 가량 지연되던 영국산 사륜구동자동차, 일명 지프형 승용차도 지난해 말 북한에 보냈다면 시골 길이나 비포장 도로를 잘 달리는 사륜구동차 덕분에 지하수개발연구소의 활동영역도 넓혀졌다고 덧붙임.
 - 린튼 대표는 앞으로 북한 12개 시도에 깨끗한 물을 찾을 시추장비를 한 대씩 보내서 전국 소학교와 초급, 고급 중학교 등 1만여 곳에 우물을 파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 민주, 홍사덕 北 비료지원 발언에 "친박' 소신 오랜만" 환영(뉴시스, 3/15)
 -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15일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의 '설령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불허하더라도 민화협 정도가 부딪쳐서 금이 가게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오랜만에 들어보는 '친박' 정치인의 소신"이라며 환영을 표명함.
 - 허 부대변인은 "북한의 '분조관리제' 도입으로 농업생산물 분배방식에 변화가 오고 있고, 비료제공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상황판단도 '꿀 먹은 병어리'인 통일부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함.
 - 또한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사업과 대북지원사업이 가야할 바를 보여준 홍사덕 상임의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임.

8. 북한동향

- 부시 前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중 발언(北 인권문제, 제재 등)에 대해 '北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부시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라고 비난(3.9, 중앙통신·노동신문/인간추물들을 개여 올리는 역겨운 추태)



- 北, 일본의 '과거사 부정·왜곡'을 지적하고 "반인륜적 범죄에는 절대로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은 과거범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는 것으로써 역사의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3.9, 중앙통신·노동신문/반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를 지속 비난하며 '미국이 남한의 군사적 강점과 주한미군 범죄행위, 反北 적대시정책 실시 폐해' 등 거론하며 "미국을 세계최대 인권유린 범죄국가"라고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민족의 자주적 권리를 유린하는 악의 제국)
-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허용 새 지침, 3월 마련' 교도통신 보도인용, "〈무기수출 3원칙〉 포기의 본질적 목적은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아시아맹주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데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책동 경계' 강조(3.10,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3.13 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美 국무부 대변인의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3.9) 언급'에 대해 '남의 선거에 주제넘은 시비'라고 비난(3.13, 중앙통신)
 - ※ 美 국무부 '사키' 대변인, 3.10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김정은이 100% 찬성률로 선출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전세계 민주주의의 모델이 아니다" 등 농담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